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활동보고서

담당부서 : 경영전략본부 정책혁신부

Tel : 061)900-2147 | 집필자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위원 : 오영주, 이원재, 정유란, 정정숙, 정창호, 홍태림 / 간사 : 조강주)

I. 개요

II. 운영 현황

III. 주요 활동

IV. 성과 및 한계

V. 향후 과제

목 차

I. 개요	1
1. TF 구성 배경	1
2. TF 구성 취지와 활동 방향	3
3. TF 구성과 운영 개요	4
II. 운영 현황	5
1. 아르코 23개 혁신의제 검토 및 조치	5
2. 블랙리스트 관련 대내외 소통	6
3. TF 운영 경과 및 주요 논의 내용	7
III. 주요 활동	9
1. 블랙리스트 관련 대내외 소통 활동	9
2. 아르코 23개 혁신의제 검토 및 조치	17
3. 블랙 TF 4대 추진과제 검토와 추진	21
4.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현안 대응 활동	32
IV. 성과 및 한계	37
1. 활동 성과	37
2. 한계	38

표 목차

[표 1-1] 블랙 TF 구성과 운영 일정 개괄	4
[표 2-1] 아르코 23개 혁신의제의 검토에 따른 과제 유형	5
[표 2-2] 블랙 TF 4대 과제별 주요 추진 내용	6
[표 2-3] 블랙 TF 개최 회의 일시와 논의 안건	7
[표 3-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유형	10
[표 3-2] 예술위 블랙리스트 피해 유형 및 대응 내용	11
[표 3-3] 블랙리스트 피해자 소통을 위한 외부 자문회의 개최 개요	13
[표 3-4] 조직문화 혁신 및 직원 행복 프로젝트 운영 현황	15
[표 3-5] 아르코 혁신 TF 23개 혁신의제의 점검 결과 유형화	18
[표 3-6] 15개 지속 수행 과제 심층 분석 및 논의 결과	19
[표 3-7] 문예기금 자원 대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개요	23
[표 3-8] 심의제도 관련 정책혁신 소위원회 논의 내용 요약	25
[표 3-9] 문체부 산하기관 갑질 관련 설문조사 결과	29
[표 3-10] 블랙리스트 관련 자체 감사 진행 경과	32
[표 3-11] 성명서 전문	34

1. 개요

1. TF 구성 배경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로 약칭)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였음. 또한 예술위는 그동안 기관 차원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 조치, 기관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과제 도출, 구조적 독립성 확보 노력과 원칙 표명, 문체부와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체결 등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수행함.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예술위의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 조치 및 혁신과제의 도출

- 예술위는 2017년, 6기 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대한 징계, 예술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몇 차례의 공식 사과를 진행
- 또한 아르크 혁신 23개 과제 도출, 심의제도 개선,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제정, 기타공공기관으로의 기관 유형 변경 등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을 이어가며 예술인 중심의 합의제 기구라는 기관의 정체성 복원 모색
- 2020년에 출범한 7기 위원회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6기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계승하면서 혁신과제들에 대한 점검 등 지속적 노력을 경주

○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독립성 확보 노력과 원칙 표명

- 7기 위원회 초기에 6기 위원회 때부터 진행한 위원장 호선제 복원 과제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완수하였으나, 6기 위원회부터 논의되어 온 문체부와 예술위 간 자율운영 협약 체결은 정체
-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위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가 2021년 1월 '2021년, 해결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아르크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입장문'을 발표하며 문체부와 예술위 간 자율운영 협약 체결과 국회의 낙하산식 지정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 촉구
- 2021년 2월, 7기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성찰과 대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예술위 구성원, 예술 현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체결 및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 추진

- 7기 위원회는 국회의 낙하산식 지정예산 관리체계를 수립했고, 문체부와 예술위 간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의 체결을 추진하여 2021년 3월에 체결 완료
- 비록 공동 협약이 아니라 공동선언의 형식이어서, 기관 상호 간의 자율운영 보장에 대한 구속성의 강도는 완화되었으나 상호존중과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예술정책과 이슈 등에 대해 열린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연 2회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에 합의

-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정례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예술위는 이 간담회에서 예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했으며, 그 제언들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피드백 받는 등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 7기 위원회는 예술위가 기존에 추진한 다양한 활동들이 현장의 신뢰 회복과 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 활동들이 예술생태계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정 기간 블랙리스트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공감
- 23개 혁신의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점검,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체부 이행협치단과의 추가 협의, 블랙리스트 관련 형사민사소송 등에 관련한 대응, 피해자 회복 시스템과 프로그램 등 블랙리스트 관련 중장기 의제 도출과 실천을 위한 지속적 논의의 장과 구조 필요
-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으나 예술 현장 피해자들의 상처가 회복될 만한 사과였는지, 나아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추가 소통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필요
- 자율운영 보장에 대한 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사항 점검 등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위원회가 예술 현장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방안 검토 등 필요
- 결론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예술위의 신뢰 회복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예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이 요망되는 만큼 관련 필요 조치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TF와 같은 일종의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도달

2. TF 구성 취지와 활동 방향

■ TF의 구성 취지

- 예술위의 조직과 사업의 자율성, 독립성,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할 구조적인 전환 전략에 근거해 예술인과 예술 행정인 간 신뢰 회복과 예술생태계의 민주적 복원을 위하여 실질적 차원의 활동 추진
 - 블랙리스트 사건은 예술가와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국가범죄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예술계 피해자들의 고통도 심대함. 이 고통에 대한 경청과 소통, 해소를 모색하는 예술위의 공식적인 후속 조치 실행
-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술위를 혁신하기 위해 도출된 혁신과제들이 문서나 구두 약속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과 사업의 혁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시키고, 촉구하는 역할 담당

■ TF의 활동 목표

- TF 준비회의에서 검토한 23개 아르고혁신과제 중 4대 혁신과제의 달성을 위한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
- 블랙리스트 피해자와의 소통 방안 및 소통 모색
- 예술위 내부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소통 방안 검토
-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예술계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사업 등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 수용 촉구
- 문체부와의 자율운영 공동선언 이후의 정기간담회 의제 제안 선도

■ TF의 활동 원칙

-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관점을 견지
- 예술위 내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소통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무처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
- 예술계 현장과의 신뢰 회복을 통한 예술 파트너십 복원과 강화를 상기

3. TF 구성과 운영 개요

■ TF 구성 (7인)

- TF 팀장: 정정숙 위원
- TF 팀원: 이원재, 정유란, 홍태림(이상 비상임위원),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상 사무처)
- TF 간사
 - 정책혁신부 김성범 과장(2021년 11월~2022년 1월)
 - 정책혁신부 조강주 책임연구원(2022년 1월~현재)

■ TF 구성 논의안 제출: 제304차 위원회 전체회의 논의안 상정

- 2021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준비회의체 구성(안) 상정: 2021년 5월 28일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이하 블랙 TF로 약칭) 준비회의체 운영

- 2021년 6월 10일~2021년 10월 8일(1~6차 회의)
- 아르고 혁신과제의 우선적인 검토 및 블랙 TF 역할에 대한 논의
 - 아르고 혁신과제 23개의 추진 현황을 과제별로 각각 점검하여, 사회적 의제(3개), 지속 수행 과제(15개), 보완·확대 과제(5개) 등 세 가지 유형의 과제로 분류
 - 23개의 혁신과제 중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구조 및 이행협치단 후속 조치 등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블랙 TF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전담 과제 4개를 다음과 같이 선정
 - 1) 단순수탁, 지정교부사업 정비 및 안정 자원 확보
 - 2) 심의제도 혁신
 - 3) 예술 가치 확산
 - 4) 예술위와 문체부 간 수평적 협력관계
 - 전담 과제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속 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연관된 소위원회와 사무처에 위임하여 논의 및 검토, 사업과 활동에 반영해줄 것 요청
 - 블랙리스트 관련 예술계 이슈에 대한 대응
 - 블랙리스트 피해자 및 사무처 회복 시스템과 프로그램 등 중장기 실천 의제 연구 결과 공유
 -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예술위와 예술계 현장의 소통과 공유 방안 논의(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등)
- 블랙 TF 준비회의체는 아르고 혁신과제 점검 및 블랙 TF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약 4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0월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블랙 TF로 출범

■ 블랙 TF 운영 기간

- 2021년 10월~2022년 5월(※ 7기 위원회 임기종료 시까지)

[표 1-1] 블랙 TF 구성과 운영 일정 개괄

시 기	구 성	회의 개최	비 고
'21.5.28.	위원회 전체회의	· 위원회 전체회의 블랙 TF 구성 논의 안건 상정	
'21.6.~10.	준비회의	· 블랙 TF 준비회의 1~6차 개최	TF 과제(4개) 도출
'21.10.~현재	본 회의	· 블랙 TF 본 회의 1~14차 개최	

II. 운영 현황

1. 아르코 23개 혁신의제 검토 및 조치

■ 아르코 23개 혁신의제 개별 추진 경과 점검

- 23개 혁신의제의 개별 검토에 따른 미래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3대 유형화
 - 예술위 자체 해결이 어렵고 사회적 공론화를 해나가야 하는 사회적 의제
 - 장기·지속 관리가 필요한 지속 수행 과제
 -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보완·확대가 필요한 과제
- 지속 수행 과제 중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한 4개의 과제는 TF에서 직접 추진

[표 2-1] 아르코 23개 혁신의제의 검토에 따른 과제 유형

과제 구분	과제명	전담 부서
사회적 의제 (공론화)	·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조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운법 제외(조직) · 위원추천위 구성 권한 예술위 이관(조직)	- - -
지속 수행 (부서별 추진 의제)	· 단순수탁, 지정교부사업 정비, 안정 재원 확보(조직) · 심의제도 혁신 · 예술의 가치 확산 · 문체부와 예술위 간 상호존중 협력 관계 구축(조직)	블랙 TF 담당 (직접 추진)
	· 공모 및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국민 참여 확대(조직)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정책협의기구 역할 강화(조직) · 정책 결정 과정의 현장 의견 반영 · 창작 지원 우선, 향유 지원 연계 · 다양한 비평 활동 지원 · 예술인 눈높이 맞는 예술 행정 · 최저임금 및 공정 단가 기준 마련 · 공공 부문 예술인 일자리 발굴 · 예술인 참여워크숍 등 예술인 교류 활성화 · 사후 평가 강화, 다년간 지원 신설 · 예술위 사무처 조직혁신안 마련(조직)	전체 부서 현장소통 소위 현장소통 소위 정책혁신 소위 예술창작본부 예술창작본부 별도 검토 정책혁신 소위 지원총괄부 별도 검토 경영전략본부
보완, 확대 (위원회 집행의제)	· 소위원회 활성화(조직) · 개방직 직위 도입(조직) · 신진예술인 도전 기회 제공 확대 · 다원예술 지원 ·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정책혁신부 경영전략본부 인력개발원 지원총괄부 지원총괄부

○ 블랙 TF 4대 과제별 담당위원 및 논의 진행

[표 2-2] 블랙 TF 4대 과제별 주요 추진 내용

과제명	담당위원	주요 추진 내용
단순수탁, 지정교부사업 정비, 안정 재원 확보	오영주, 정창호	· '21.11월 현재 재원 확충(안) 점검 ~'22.2월 재정전문가 관련 자문회의(2회) · '21.12월 장관 간담회 재원 확충 추진체계 구축 요청 · 문체부 내 기금 재원 TF 구성
심의제도 혁신	이원재	· 정책혁신 소위 연계, 공정심의 만족도 조사, 심의위원 풀 구성 및 심의제도 공론장 마련 등 논의
예술의 가치 확산	정정숙	· 예술가치확산 소위(6기 위원회) 활동 결과 및 문화예술후원센터의 예술 가치 확산 활동 공유 및 확산 방안 제시 · 예술 가치 확산 관련 연구용역 2개 제안
문체부와 예술위 간 상호존중 협력관계 구축	홍태림	· 상호존중 협력체계 구축 관련 구조적 개선안 6개, 인식적 개선안 2개 등 안 마련

2. 블랙리스트 관련 대내외 소통

■ 블랙리스트 관련 대내외 소통과 이슈 대응

- '블랙리스트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 내 조직문화 개선,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 등 방안 도출 및 적용 방안 논의
- 블랙리스트 피해자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수정 관련 논의
- 블랙리스트 피해자 소통 방안 논의 및 예술계 현장의 단체 및 전문가 사전간담회 개최
 - 블랙 TF-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 간담회('21.12.3.)
 - 블랙 TF 추진과제 관련 자문,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방안
 - 블랙리스트 문제 재발 방지 방안, 이행협치추진단 운영 경과 및 향후 일정 공유 등
 - 피해자 연속 간담회 관련 사전 1차 자문회의('22.2.15.): 예술계와 블랙리스트 연구자 등
 - 피해자 소통을 위한 타 기관(국립극단) 사례 자문회의('22.2.25.): 국립극단의 소통 방향과 유의 사항 공유
 - 블랙 TF-사무처 본부장급 간담회 개최('22.3.16.)
 - 블랙 TF의 기존 활동 내용 공유 및 블랙리스트 관련 대내외 소통 방안에 대한 사무처 임원급 공유와 소통의 시간 마련
 - 창작산실 피해자 개별(비공식) 간담회('22.4.1./4.8./4.25.): 양 당사자 소통과 화해를 위한 간담회
 - 피해자 연속 간담회 관련 사전 2차 자문회의('22.2.15.):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심 의견 수렴
- 블랙리스트 관련 예술계 이슈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21.11.18.)

3. TF 운영 경과 및 주요 논의 내용

■ 블랙 TF 운영 경과

- 블랙 TF는 6차에 걸친 준비회의와 1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으며, 필요시 이행협치추진단, 관련 피해자, 전문가 등과 자문회의를 병행했음. 일시별 블랙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3] 블랙 TF 개최 회의 일시와 논의 안건

일시	회의명	주요 논의 내용	비고
2021.6.10. ~10.8.	블랙 TF 준비회의 1~6차	· 아르고 혁신과제 진행 상황 검토 및 TF 활동 의제 선정	블랙 TF 공식 발족 (2021.10.28.)
2021.10.28.	1차 정기회의	· 피해자 소통 방안 논의 · 블랙 TF 담당 4대 과제 후속 조치 논의	
2021.11.8.	2차 정기회의	· 블랙 TF 운영 방향, 로드맵 논의 · 피해자 소통 관련 자료 검토 · 내부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논의 · 대토론회 등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경과 공유 방안 논의	
2021.11.17.	3차 정기회의	· 블랙리스트 피해 유형별 소통 방안 · 이행협치추진단 간담회 안건 논의	
2021.12.1.	4차 정기회의	·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 등 진행 상황 검토 · 외부 소통 관련 논의	
2021.12.3.	이행협치추진단 간담회	· 피해자 소통 및 사회적 기억사업 등 안건 논의	
2021.12.8.	2021년 아르고 대토론회 참여	· 블랙리스트 세션 운영 · 제도 개선 등 과제 추진 경과 대외 공유	발제 2명, 토론 2명 (온라인 생중계)
2021.12.15.	문예기금 확충 재정전문가 자문회의	· 기금 안정 재원 확보 방안 자문	외부 재정전문가 3인 참석
2021.12.23.	5차 정기회의	· 4대 과제 논의 안건 검토 · 이행협치추진단 간담회 결과 논의 · 내부 회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 논의	
2021.1.13.	6차 정기회의	· 블랙 TF 과제 조정 논의 · 블랙리스트 백서 기반 6개 사업 피해자 소통 방안 논의 · 사무처 직원 대상 내부 소통 방안 논의	
2021.1.25.	7차 정기회의	· 피해자 소통 관련 자문회의 논의 · 4대 과제별 진행 경과 공유	
2022.2.15.	피해자 소통 관련 자문회의(1차)	· 피해자 소통 방식 및 운영 방안 자문	이행협치추진단 위원 등 6인 참석
2022.2.15.	재정전문가 자문회의	· 기금 안정 재원 확보 방안 자문	외부 재정전문가 4인 참석
2022.2.17.	8차 정기회의	· 대내외 소통 원칙 및 방안 설계 논의 · 4대 과제 개선 방향 논의	
2022.2.25.	피해자 소통 관련 타 기관 사례 자문회의(2차)	· 국립극단 피해자 소통 사례 자문 및 피해자 소통 쟁점 의견 청취	국립극단 사무국장 및 피해자 소통 담당자 2인 참석
2022.3.8.	9차 정기회의	· 피해자 소통 원칙 및 방안 설계 논의 · 대내 소통 프로그램 세부 추진 방안 논의	

일시	회의명	주요 논의 내용	비고
2022.3.16.	대내외 소통 관련 사무처 본부장 간담회	· 블랙 TF 대내외 소통 추진 방안 공유 및 의견 청취	
2022.3.23.	10차 정기회의	· 피해자 소통 간담회 세부 추진 방안 논의 · 블랙리스트 사건별 피해자 리스트 정리 및 논의	
2022.4.1./ 4.8./4.25.	창작산실 피해자 소통 관련 간담회(1~3차)	· 2015년 연극 창작산실 건 피해자 및 사무처 직원 간 소통·화해 추진	
2022.4.6.	11차 정기회의	· 피해자 소통 간담회 세부 추진 방안 논의 · TF 임기 종료에 따른 예술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추진체계 공고화 방안 논의	
2022.4.21.	12차 정기회의	· ‘표현의 자유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논의	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
2022.4.28.	피해자 소통 관련 자문회의(3차)	·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노력 공유 및 피해자 소통 방안 의견 청취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등 4인 참석
2022.5.10.	13차 정기회의	· 피해자 소통 관련 3차 자문회의 결과 논의 · ‘표현의 자유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논의 · 블랙 TF 활동보고서 작성에 관한 논의	
2022.5.26.	14차 정기회의	· 블랙 TF 활동보고서 초안 검토 및 논의 ·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논의 · 창작산실 소통 결과와 감사처분보고서 공지 건	

Ⅲ. 주요 활동

1. 블랙리스트 관련 대내외 소통 활동

1) 대외 소통을 위한 준비 활동

(1) 대외 소통 방안 논의

■ 논의 배경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소통하려는 과정은 부족한 상황
- 예술위의 경우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피해자 중심, 현장 중심의 접근을 원칙으로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모색해 왔지만, 피해자 감수성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미흡
- 예술위 블랙 TF 활동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사회적 회복을 위한 전환 계기 마련
- 블랙 TF 활동을 통해 블랙리스트 관련 현장 거버넌스 형성과 협력을 통해 현장 주도, 피해자 중심의 회복 노력·접근 필요
-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예술위 활동을 예술계와 공유하고, 예술 현장과의 관계성 회복을 모색하는 한편, 예술계 피해자들의 예술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창작 의욕, 심리적 회복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 체계 구축 필요

■ 논의 내용

- 블랙리스트 피해 유형 검토
 - 피해자가 단일하지 않고, 피해 양상도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고려해야 함. 블랙리스트 피해 현황을 정리한 파일을 확인하여 피해 현황에 대한 사전 검토 선행 필요
 - 블랙리스트 피해 양상은 예술인 개인과 단체, 사업 관련 등 대상과 규모도 다양하므로 유형을 3~4가지로 구분해 유형별로 어떤 소통 방식이 가능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 필요

[표 3-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유형

구분	유형 정의	사례
사찰	-국가, 정보기관 등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상적인 동태를 살펴 조사하는 행위	-시국 선언 명단 수집, 정치적 성향 파악
감시	-국가와 정부(또는 기업)가 시민을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동을 지켜보는 행위(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정보 수집 포함)	-전화 도청, 스마트폰 사용 내역·문자·컴퓨터 해킹 등의 정보 수집부터 도청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감시 포함
검열	-정부 당국에 책, 영화, 연극 등의 내용이 사회적 또는 윤리적 규범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예술 매체에서 제시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공권력에 의해 예술작품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하는 행위)	-사전검열 : 작품 불허·취소·교체, 작품 내용 개입, 상영 거부, 작품 손상, 작품 철거, 작품 운송 거부 등 -사후검열 : 상영 중단, 문화예술인에 대한 고발, 예술가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 등 -자기검열 : 작품 내용 수정, 지원 신청 철회 등
배제	-국가와 정부가 다양한 권리, 기회, 자원(예, 고용·참여·예산 지원)으로부터 개인 또는 특정 단체를 체계적으로 제외시키는 행위	-지원(금) 배제 또는 삭감·중단 -심사위원 배제, 인사 선임 시 특정 인물 배제 -공연자·연출가·작가 배제, 행사 초청 배제, 수상 배제 등 -대관 배제(공연장 폐쇄), 전시 취소, 강연 취소 등
통제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또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권력의 행사로서 결과를 평가하고 시정하며 조정하는 활동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정책, 제도, 사업 개편(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변경, 사업 폐지 등) -사업 예산 축소·전용·폐지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심사 반복 요구 등) -불공정한 사후 평가를 통한 제재 조치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민간 활동에 부당 개입(선거 개입, 인사 개입, 포기 각서 요구, 표적 감사, 공연 방해 등)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특혜(특정 단체 및 개인 특혜 지원) -사업 위상 격하(작품 및 행사 위상 격하, 시상 결과 격하) -고용, 모집,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특혜 또는 배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권, 위원회 활동 보고서」, p. 23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시한 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예술위 해당 사항은 검열, 배제, 통제 등의 유형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

[표 3-2] 예술위 블랙리스트 피해 유형 및 대응 내용

구분	피해 유형		대응 내용
외부*	검열, 배제형 불공정 심의 유도	상급기관 배제 지시	○ (현재) 1) 아르고 23개 혁신의제의 검토와 추진을 통한 조직과 사업 혁신 추진 2) 피해자 소통을 위한 준비 자문회의 등 추진 - 예술계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피해자 소통을 실현하고 있는 국립극단 사례 청취 - 사무처 임원급과 피해자 소통 시기 및 방안 공유 등 ○ (당시) 외압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자구책 - 지원 필요성 건의, 설득을 통한 배제 최소화 - 지원 배제 거부 심의 강행 - 우회적 방법의 지원, 지원 사실 문체부 미보고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부, 2018)**
		심의위원 풀 배제, 심사기준 등 심의제도 변경	
		일부 심의위원에게 관련 정보 제공	
	통제형 개입	공연 방해	
		대관 배제	
		공연 포기 중용	
통제형 허위 보고서 작성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통제형 보고	신청 명단 문체부 송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1권」, p. 511

**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부(2018.10),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징계권고안 검토 결과 및 징계 처분 요구서」, p. 23

○ 예술위 블랙리스트 사건들의 피해자 연속 간담회 추진 논의

- 사안별, 피해자별,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한 간담회 추진
- 일차적으로 진상위 조사 백서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6개 사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착수 논의
 - 6개 사업의 리스트 예시
 - ①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 및 서울연극제 배제
 - ② 2015 다원예술창작지원 배제
 - ③ 2015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심사 반복 요구 및 공연 포기 강요
 - ④ 2015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 지원 배제
 - ⑤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지원 배제
 - ⑥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
- 피해자 연속 간담회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술위 직원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 시 블랙 TF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 당사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로 판단되는바,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논의
 - 피해자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블랙 TF는 ① 사업관계자의 직접 사과, ②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TF 차원에서의 수용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정
- 간담회 과정의 소통, 논의의 진행 과정을 보며, 후속 소통 체계 기획

○ 블랙 TF 주관 공개 청책(聽策) 포럼 정례화 논의

- 격월 또는 분기별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개 포럼 개최
-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발표(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소통·논의하는 공론장으로 운영
- 청책 포럼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축적·정리하며 예술위가 수용해서 추진해야 할 내용을 의제화 및 사업화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취합, 기록하여 연간 단위로 청책 포럼 구술자료집 발간
- 예술위의 자체 기억 및 치유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 매년 12월 연간 토론회(가칭 '이후포럼') 개최 정례화 논의

- 매년 12월 초에 개최
- 예술위 연간 대토론회와 연계하여 운영
- 예술위를 비롯하여 매년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태 후속 조치, 피해자들의 목소리 등을 공유하고 숙의하는 토론회로 운영
- 개별 연도의 토론회 개최로 머물지 않고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사회적 성찰과 회복의 노력이 연결·축적, 아카이브 될 수 있는 운영 모색
-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 운영 제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 검토
 - 피해자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기반으로 추진하되, 개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추진
 - 피해자들의 이니셔티브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 기획, 운영
 -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사업 제안 및 기획,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
 - 예술위의 자체 기억 및 치유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 논의 결과

-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예술계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의지 표명의 측면에서 연속 간담회 추진
- 일차적인 연속 간담회 추진으로서 6개 사건을 중심으로 착수하되, 눈덩이 방식의 점증적인 확대 방향으로 추진
- 1차 추진 대상 6개 사건에 대해 사안에 따라 소수 참여(2건)와 블랙 TF 위원 전체 참여(4건)로 구분하여 추진
 - 2개 사건(2015 연극 창작산실, 팝업 씨어터)은 당사자 간 화해를 목적으로 추진하되, 내외부 매개자의 사전 설득단계 등을 거쳐 진행. 내외부 매개자의 사전 논의가 필수이며, 소수 참여방식으로 수행
 - 4개 사건(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및 서울연극제, 2015 다원예술창작지원, 2015 공연예술발표공간)은 피해자 리스트를 정리한 후, 집단적 간담회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 피해자 섭외 및 참여 여부, 일정 조율 등을 거쳐 진행. 블랙 TF 주관으로 TF 위원 전체 참여
 - 소통 대상·범위: 백서를 기준으로 피해자 리스트 작성. 사건 당시 피해 당사자와 현재 집행부가 다른 협·단체의 경우 양자가 모두 소통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소통 결과·후속 조치: 화해와 회복,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교재 개발 차원에서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 관점의 기억·의견 청취, 추후 희망자의 경우 원고 집필 의뢰 가능

(2) 외부 자문 추진

■ 추진 배경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을 현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감각하고 의미화
-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마련의 출발점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기회 우선 추진
- 블랙리스트 관련 대외 소통 경험이 축적된 타 기관의 사례 검토와 학습을 통한 소통 준비 필요
-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예술위 활동을 공유하고, 예술위와 예술계 현장과의 관계성 회복 계기 마련

[표 3-3] 블랙리스트 피해자 소통을 위한 외부 자문회의 개최 개요

구분	일시	외부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1차 자문회의	2022.2.15.	-공재민(전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 전 서울연극협회 사무처장) -김우진(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재상(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사소송 지원단) -이양구(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이행협치단 위원) -정원옥(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운영위원) -정윤희(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행협치단 위원)	-피해자 관점을 가진 전문가 입장에서 피해자 소통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2차 자문회의	2022.2.25.	-오현실(국립극단 사무국장) -정용성(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장)	-국립극단 피해자 소통 사례 및 소통 방식, 소통과정의 애로사항 청취
3차 자문회의	2022.4.28.	-오성화(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이은주(서울프린지네트워크 기획 총괄) -윤한솔(극단 그린피그 연출가) -이훈경(극단 제자백가 대표)	-블랙리스트 소통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 추진 과정에서 수렴한 자문과 조언 내용

- 피해자 소통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 후 접근 필요
 - 피해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일회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전제한 예술위의 노력·의지가 연계되어야만 피해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음.
 -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개선 방안(대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이끌기 어려울 수 있음.
 -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논의 결과가 기록된다거나 제도 개선에 반영된다거나, 피해 보상 등 피해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개선 내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로만 가중될 수 있음.
-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에 대한 예술위의 의지에 대한 지적
 - 블랙리스트 사건이 예술위의 근간을 흔든 사건인데,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관련 조직이나 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 동력과 의지에 의문이 있음.
 -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술위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 등에 공유하고,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

- 블랙리스트를 인식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성향·관점 차이 존재
 -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①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당사자, ② 피해가 있음에도 소극적인 입장의 당사자, ③ 블랙리스트 자체의 언급을 꺼리는 당사자 등 피해자들의 성향과 관점, 입장이 다양하게 존재
 -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것이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인식한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음.
 - 피해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이 있으므로, 피해자 소통 방식에서도 이들에게 사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피해 인식 수준도 다양하므로 간담회 방식과 소통 방법에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대외 소통 대상·범위에 대한 숙의 필요
 - 개별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서 신뢰·회복 지점을 찾거나 소통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피로감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사안별 당사자를 구분하는 것도 과제임. 예컨대 피해자가 개인이면 소통 대상이 변하지 않으나, 단체는 당시 집행부와 현재 집행부가 다른 경우도 많음.
 - 블랙리스트 사건 발생 시점으로 거슬러 가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대외 소통 방식에 대한 숙의 필요
 - 개인 차원보다는 공론장 방식의 소통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술위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예술위가 직접 주체가 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피해자 권익 활동단체 등)와 협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단체의 공론화 활동을 지원하거나, 공동 포럼·공론장 등을 개최하는 것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소통 과정의 노하우 및 애로사항
 - 기관이 책임 있게 대외 소통 업무를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보여주어야 함.
 - 국립극단 사례의 경우, 구술 채록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고 대면회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관련 실무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홍보마케팅팀장이 피해자와 1:1 소통하는 전담 방식으로 운영
 - 기관 간부급이 직접 추진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음.
 - 피해자 설득이 어렵거나 마음을 잘 열지 않을 때, 이행협치단 위원 등 제3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한 사례도 있음.
 -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음.

■ 추진 결과

- 일회성 간담회 형식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안별 접근 필요
- 블랙리스트 피해자 활동 단체들의 소통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 병행 필요
- 블랙리스트 관련 공개·개방형 공론장을 기획하여 추진
- 외부 소통에 대한 내부 동력 확보 노력 필수
- 전담 인력 및 상시적인 소통 채널 확보 필요

2) 대내 소통 방안 검토

■ 검토 배경

-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예술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와 함께 예술위 내부 직원들도 대외적인 비판 및 내부적 갈등 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음.
- 당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안은 무엇이었으며, 현재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부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치유 방안 모색 필요

■ 검토 내용

- 현재 조직문화 혁신과 직원행복 프로젝트 운영현황 및 실적 등의 현황 파악
 - 지방이전 및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침체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아르고 혁신 TF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2017. 7월 조직문화혁신 및 직원행복 프로젝트 착수*
 - * 직원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주 1회 점심시간 확대, 기념일 휴가제도 등 도입
 - 2018년 유연근무제 확대, 2019년 임직원 소통 프로그램 신설 등 직원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운영 중

[표 3-4] 조직문화 혁신 및 직원 행복 프로젝트 운영 현황

구분		내용	대상	운영 실적
직원 치유	심리상담(EAP)	-외주 계약을 통한 임직원 개별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	전 직원	'20년 27인 118회 '21년 10인 21회
	고충상담실 운영	-인사담당자와 업무 내외적 스트레스 수시 개별 면담 진행	전 직원	연간 5명
	생일 축하	-전 직원 대상 생일 케이크, 꽃다발, 편지 배달서비스 진행	전 직원	연간 300명
조직 문화 활성화	수요일 더블런치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사내 간담 활성화	전 직원	연간 300명
	소통 프로그램 운영	-직원 간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한 10개 소통 프로그램 운영	전 직원	연간 300명
	사내동아리 지원	-직원 5인 이상 동아리에 모임 비용 월 최대 10만 원 지원	매년 10개 동아리 선정	'20년 15팀 '21년 시행 예정
	월례조회	-월 1회 경영진 조직 운영 방향 및 기관 현안 공유	전 직원	'19년 12회 '20~'21년 미시행
일·가정 양립 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출근 시간 자율제도] 오전 8~10시 사이 자율출근하여 일 8시간 근무	전 직원	143인 이용
		-[임신부 및 자녀 돌봄 직원 보호] 임신 중이거나, 72개월 미만 자녀 양육 시 급여 삭감 없이 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해당 직원	22인 이용
		-그 외 가족 돌봄, 육아 시간, 학업 등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유연근무제도 운영	해당 직원	1인 이용
	기념일 특별휴가	-생일, 입사기념일, 가족기념일 등 연 1회 기념일에 특별휴가 부여	전 직원	78인 이용

- 기관 자체 기록을 통한 피해자와의 신뢰 구축 방안 모색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닌 기관 차원의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노력도 있어야 하는데 그간 방치되어 온 측면이 있음.
 -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직원들에 대한 치유·회복 문제는 다루어진 적이 없었음. 사무처 고민을 통해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마련 필요
 -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용 내부 기록 자료 제작
 - 문화부 차원의 교육자료는 전체 기관용으로 위원회 특색에 맞는 자료 필요
 - 내부 기록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 의지 표명
 -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블랙 사태에 대한 내부 성찰 및 자연스러운 소통 기대
 - ※ 내부 성찰 용도의 기록을 통해 후배들과의 소통과 재발 방지 및 예술계와의 신뢰 확산 주력
 - 과거 블랙리스트 작동 경위 및 내부 성찰 기록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기억과 재발 방지 필요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입직원 입사 시 제공함으로써 숙독 기회 마련
- 내부 소통 및 자료 개발을 위한 자체 그룹 구성 방안
 - 블랙리스트 발생 당시 간부 및 직원과 그 이후 신규 직원들을 포함하여 자율적 구성

■ 검토 결과

- 심리상담이나 고충상담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담 내용은 사생활 및 비공개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상처와 관련된 상담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 사무처 단위에서의 대내 소통은 외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내부의 자발성이 중요
 -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만드는 등 내부 동력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무처에는 블랙 관련 직간접 경험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소통을 희망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부터 시작하여 간접적인 희망자까지 간담회 참여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적절
- 대내 소통 관련 블랙 TF에서 고민하는 사항들에 대해 노조와 공유하고,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피해자 관점에서 예술위 직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이중고통을 받는 내용을 경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임.
- 이 결과보고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8기 위원회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한편 결과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사무처와 일반직원들의 연대체인 노동조합과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임. 그리고 추후 내부 소통은 노동조합이 일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2. 아르고 23개 혁신의제 검토 및 조치

■ 검토 배경

- 2018년 1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예술위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아르고 혁신 TF'를 구성·운영
- '아르고 혁신 TF'는 예술계 및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내실 있는 예술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 영역과 운영 조직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분석으로 현장 요구를 담은 예술위 혁신과제를 수립
- '아르고 혁신 TF'에서 제안한 23개 혁신의제는 조직 분야 10개 과제, 사업 분야 13개 과제로 도출
- 조직 분야는 국가문화예술위원회, 공운법 제외 등의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를 일정 부분 진행 중. 사업 분야 13개 과제는 완전히 완료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 일정 부분 추진되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하는 상황임.
-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과의 간담회 추진 결과, 아르고 혁신 TF에서 제안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방안이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방안들과 연관하여 블랙 TF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이와 관련하여 23개 혁신의제 중 블랙 TF 차원의 추진과제를 선별하고, 집중 논의하는 방향성 수립

■ 검토 내용

- 23개 혁신의제의 진행 상황 검토
 - **(사회적 의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문체부·국회 등 외부 기관의 역할이 보다 크고, 예술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로 정의
 - 사회적 의제 3개는 각 과제가 서로 선결후행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술위 내부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되, 블랙 TF에서 다룰 전담 과제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
 - **(보완·확대 의제)** 해당 과제가 일정 부분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기관의 지속적인 확대·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로서 '보완·확대 의제'로 정의. 이러한 기준에서 5개 과제가 일정 부분 추진된 것으로 인정됨.
 - **(지속 수행 과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과제화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정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블랙 TF보다는 이미 관련된 과제를 다루고 있는 예술위 자체 소위원회나 사무처 내부 부서와 조직을 통해 진행할 내용은 블랙 TF 추진과제에서 제외
- 15개의 '지속 수행 과제'에 대한 개별적 심층 점검
 - 15개 '지속 수행 과제'에 블랙리스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점검하고 파악
 - 과제별 담당 위원을 지정하여 과제의 배경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심층 분석 추진
 - 1) 해당 과제 관련 블랙리스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는지 점검
 - 2) 블랙리스트 차원의 문제로 블랙 TF가 논의할 내용인지, 기존 소위원회나 예술위가 진행할 사안인지 구분
 - 3) 블랙 TF에서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세부 내용 [표 3-7] 참조)
- 심층 점검 결과를 통한 블랙 TF 추진과제 논의
 - 15개 '지속 수행 과제' 중 블랙 TF에서 추진할 과제와 위원회·소위원회·사무처 등 타 조직에서 다룰 과제를 재분류
 - '지속 수행 과제' 가운데 예술위의 당면과제, 중장기 추진과제 등은 사무처 내 유관 부서나 소위원회 등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해 이관할 것을 논의

[표 3-5] 아르고 혁신 TF 23개 혁신의제의 점검 결과 유형화

구분	과제명(아르고 혁신과제 번호)
사회적 의제 (3)	1. 국가예술위원회 전환(1번 과제)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운법 제외(2번 과제)
	3. 위원추천위 구성 권한 예술위 이관(3번 과제)
보완·확대 의제 (5)	1. 소위원회 활성화(4번 과제)
	2. 개방직 직위 도입(5번 과제)
	3. 신진예술인 도전 기회 제공 확대(13번 과제)
	4. 다원예술 지원(15번 과제)
	5.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16번 과제)
지속 수행 과제 (15)	1. 공모 및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국민 참여 확대(6번 과제)
	2. 단순수탁, 지정교부사업 정비, 안정 재원 확보(8번 과제)
	3.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정책협의기구 역할 강화(9번 과제)
	4. 정책 결정 과정의 현장 의견 반영(11번 과제)
	5. 창작 지원 우선, 향유 지원 연계(12번 과제)
	6. 다양한 비평 활동 지원(17번 과제)
	7. 심의제도 혁신(18번 과제)
	8. 예술인 눈높이 맞는 예술 행정(19번 과제)
	9. 최저임금 및 공정 단가 기준 마련(20번 과제)
	10. 공공 부문 예술인 일자리 발굴(21번 과제)
	11. 예술인 참여워크숍 등 예술인 교류 활성화(22번 과제)
	12. 예술의 가치 확산(23번 과제)
	13. 문체부와 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7번 과제)
	14. 예술위 사무처 조직혁신안 마련(10번 과제)
	15. 사후 평가 강화, 다년간 지원 신설(14번 과제)

■ 검토 결과

- 총 23개 과제로 구성된 아르고 혁신 TF 혁신의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 결과 ‘지속 수행 과제’로 분류된 15개 과제에 대한 심층 점검·논의 실시(세부 내용 [표 3-8] 참조)
- 심층 점검·논의 결과 블랙 TF 추진과제 4개를 선별하여 블랙 TF가 집중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 ① 단순수탁, 지정교부사업 정비, 안정 재원 확보, ② 심의제도 혁신, ③ 예술의 가치 확산, ④ 문체부와 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
- 블랙리스트 해결을 위한 기관 노력 및 경과 대외 공유 추진
 - 아르고 혁신 TF에서 제안된 혁신의제 진행 경과, 예술위의 블랙 TF 향후 운영 방안을 2021년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에서 공유
- 의제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유

[표 3-6] 15개 지속 수행 과제 심층 분석 및 논의 결과

과제명	주요 논의 내용	논의 결과 (추진 주체)
1. 공모 및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국민 참여 확대	-현장소통 정책 제안 홈페이지 등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술계 전반의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음 -공연예술 분야 관객평가제, 청년참여제도 등으로 참여 확대 가능 -본 TF와 연관성은 있으나 소통은 이슈별로 대응해야 할 부서가 상이하므로 블랙 TF의 전담 과제에서 제외	각 부서
2. 단순수탁, 지정교부사업 정비, 안정 재원 확보	-문예기금에서 타 기관에 지정교부로 나가는 재원이 기금 목적에 맞는지 검토 후 불필요한 기금 지출 조정 필요 -국고(일반회계)와 기금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검토 필요 -안정 재원 확보는 2017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안) 내용과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한 추가 개선점 검토 필요	블랙 TF, 기획조정부, 정책혁신부
3.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정책협의기구 역할 강화	-과거 문예기금-지자체로 교부되던 사업이 지특회계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접 관리 요소가 사라짐. 이로 인해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와 회원기관(35개) 간의 사업적 연계성이 약해짐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함께 9개 권역별 지역간담회 추진(21.5.~6.) 등 정책 과정에 대한 전국 단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노력이 필요함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는 지역 문화예술 지원체계에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전국 단위 예술가 네트워크, 지역 문화예술 관련 연구 등을 통한 지자체 문화예술정책 평가 등 새로운 체계 정립을 위한 활동이 필요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
4. 정책 결정 과정의 현장 의견 반영	-2022년 공모사업안 검토, 2023년 사업개선안 등 단기 및 중장기 과제 중 정책 결정 과정의 현장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과거 사업혁신 TF처럼 위원회 위원 중심이 아닌,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폭넓은 참여 구조를 적용해야 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모사업을 검토할 때 현장 피드백이 어떻게 적용됐고, 개선됐는지 공유할 필요	현장소통 소위원회
5. 창작 지원 우선, 향유 지원 연계	-창작·향유 순위를 정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르고 혁신의제에서도 다뤄졌지만, 향유사업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으며, 연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다만, 최근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예산 확대, 중장기 지원 확대 등은 고무적 -별도 TF를 구성하여 창작지원사업 지원예산 확대와 우수작품이 향유와 연계될 수 있게 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 필요	별도TF 검토·추진
6. 다양한 비평 활동 지원	-지원사업 내 비평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절대 규모는 여전히 작음 -본 과제는 사업뿐만 아니라 공론장이나 아르고 웹진 등 여러 채널과 연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함 -현재 예술위 총사업비 중 비평사업의 비율, 최근 5개년 추이 등 비평사업 규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증액 방안을 요청할 수 있음 -예술위 사업 공모 시 수시로 확인 필요	예술창작본부
7. 심의제도 혁신	-심의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심의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에도 최저점수 제외 검토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제도 구축을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의방식을 구현하고 있으며, 심의전문가 통합시스템으로 후보단 관리를 하고 있음 -블랙리스트 문제 소지가 있는 심의제도는 개선됐다고 판단하나, 심의제도 개선 경과 등은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	블랙 TF, 정책혁신 소위원회
8. 예술인 눈높이 맞는 예술 행정	-2019년 당시 공정심의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행정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며, 현재 지원총괄부가 계속 개선안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음 -다만, 보조금 집행 과정 정비, 행정 용어 명확화와 서류 간소화, 지원사업절차 단순화 등 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은 여전히 남은 숙제임 -현재까지 행정체계 개선 경과, 향후 개선 계획 및 행정상담지원센터(동료상담제도) 운영 가능 여부 검토 등이 필요함	예술창작본부
9. 최저임금 및 공정 단가 기준 마련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도 1호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음 -문체부와 미술창작대가 TF를 만들어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겠음	예술창작본부

과제명	주요 논의 내용	논의 결과 (추진 주체)
	-문체부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며, 장르별로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장기적 검토 과제라고 판단됨. 예술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0. 공공 부문 예술인 일자리 발굴	-예술위 사업 혁신 관련 내용으로, 블랙 TF보다 사업 관련 타 회의체에서 다룰 내용임 -현재는 예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관련 계획 수립이 본부 단위인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에 한정돼 있음 -하지만 본 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형 뉴딜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일자리 사업임. 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논의 테이블을 확대해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야 함 -또한 논의 과정에 예술위 내부, 예술 현장, 문체부 장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야 함	정책혁신 소위원회
11. 예술인 참여워크숍 등 예술인 교류 활성화	-사무처와 예술 현장의 소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된 과제로서, 블랙 TF 과제로 다룰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 -교류를 통한 투자 매칭 등 교류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함. 현장 예술계의 의견이 교류를 통해 예술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함	지원총괄부
12. 예술의 가치 확산	-예술의 가치가 행정, 입법, 사법부 등까지 확산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임 -그간 예술의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용어는 예술의 가치를 한정 짓는 용어임. '예술의 가치'라는 용어 사용이 적합함 -예술 가치를 연구하는 것은 예술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블랙 TF에서 다루되 현장 의견 수렴이 포함되어야 함	블랙 TF, 정책혁신부
13. 문체부와 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	-예술위-문체부 간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등이 이뤄졌으나 실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이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문체부와 예술위 간 공동워크숍 정례화 등을 통해 상호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블랙 TF
14. 예술위 사무처 조직혁신안 마련	-기관의 분리와 통합이 반복된 상황에서 사무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무처 내 자발적인 소통체계를 활성화할 필요 -현재 정책혁신부에서 전담하는 소위원회 관련 업무를 소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와 매칭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이는 비상임위원의 업무 과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정책혁신부 관리하에 아주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예술위 조직 연구를 수행하는바, 정책혁신부에서 후속 조치 주관	정책혁신부
15. 사후 평가 강화, 다년간 지원 신설	-본 과제는 이미 여러 사업에 반영되고 있고, 이후에도 사업적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블랙 TF에서 다뤄야 할 필요는 없음 -또한 사업 확대를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타 기금의 문예기금 전입의 법령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3. 블랙 TF 4대 추진과제 검토와 추진

1) 단순수탁, 지정교부사업, 안정 재원

(1) 단순수탁 · 지정교부사업

■ 검토 배경

○ 아르고 혁신 TF 제안 내용

- 복권기금 사업 정비와 예경 등 유사 공공기관에 이전되는 재원은 국고에 반영하여 예술위의 고유업무 강화
- 문체부와 국고 및 기금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절차 마련
 - 일반회계와 문예기금의 역할 분담 기준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 수립을 통해 사업추진체계 확립
 - 현행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운용 주체로서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법적 한계 개선 필요

○ 문예기금에서 타 기관에 지정교부로 나가는 재원은 기금 목적에 맞는지 검토해 불필요한 기금 지출 조정 필요

■ 검토 내용

○ 단순수탁과 지정교부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 (장점) 문예기금의 부족 상황에서 기금의 수익구조에는 긍정적 역할(일반회계), 해당 기관의 안정적 예산 확보 수월(일반회계), 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보완 및 개선 용이(문예기금)
- (단점) 일반회계를 통해 민간 창작활동 지원 사업수행 시 문화부의 직접 관리 대상 사업이 되어 예술창작활동에 정부 개입 가능

○ 현재 역할 분담 기준 검토

정부(일반회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기금)
· 문화예술 정책 수립, 제도화 기반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여건 조성 사업 · 국립예술단체 등 법정 민간단체 운영 지원 · 국가 주관 문화행사 등 정책적 추진사업	·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문화예술인의 후생 복지 증진 사업 · 민간단체 주최·주관 문화행사 지원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문화예술인의 후생 복지 증진 사업

- 복지정책이 미흡했던 시기에는 기금 편성이 적합하나, 복지정책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편성 고려 필요(예술인복지재단 고유사업으로 이관 가능).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기금의 용도에는 부합
 - * 관련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39억 원, 복권기금으로 문예기금 수지에는 영향 없음), 원로문예인 복지 지원(0.9억 원)
- 문화예술진흥법상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없으므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기금의 재원 안정성 중 중요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 필요(문예기금의 안정성을 우선시)

■ 검토 결과

○ 공모방식과 비교하여 비교적 쉽게 기금예산을 배정 받는 단순수탁과 지정교부사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

에서 지출 효율성, 성과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것을 위원회 및 사무처에 제안

(2) 안정 재원

■ 검토 배경

-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 확보는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해 마련된 유일한 재원
 - 위원회 존속의 최소 요건: 문예기금 사용은 법률에서 정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기금이 없으면 독립성 및 자율성 훼손
- 모금제 폐지 이후 체육, 관광, 복권기금 등 타 기금 전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재원 전입 구조의 불안정성 문제 상존
- 기금의 성격에 따라 지원의 형식과 내용이 제약되는 경우 발생
 - 2010년 초반 예술위에 복권기금이 대거 전입되면서 복권기금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편성을 하다 보니 예술위 사업이 창작보다 향유 쪽으로 급증
 - 2021년 기준 기금사업 비중을 보면, 창작역량 강화에 29.2%(1,063억 원 규모), 문화복지 분야에 42.7%(1,400억 원 규모)의 재원 배분(202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 창작역량 강화 : 예술창작지원(606억 원), 예술인력육성(216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40억 원)
- 독자적인 문예기금의 확보를 위하여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면서 근본적인 재원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검토 내용

- 기존에 도출된 재원 확보 방안 검토
 - 단기적으로 국고 출연, 타 기금 전입 등 고갈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적 안정화 재원 발굴은 법 개정을 통해 추진
 - 문화예술 발전의 혜택을 받는 타 분야의 재원(관광, 체육, 복권, 건강증진기금 등)에서 문예기금으로의 법정 전입, 세제 개편 등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
 - (단기) 일반회계 및 체육기금, 관광기금, 복권기금을 전입하여 예산 편성
 - ('19년) 3,056억 원 전입 → ('20년) 2,933억 원 전입 → ('21년) 2,675억 원 전입
 - ('21년) 일반회계 204억 원, 체육기금 970억 원, 관광기금 0원, 복권기금 1,501억 원 전입
 - (중장기)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수입원 마련 필요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김영주 의원, '18.11.) 발의 후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폐기
- 재정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및 논의와 제안 사항
 - 재정전문가에게 검토 가능한 문예기금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및 원고 요청

[표 3-7] 문예기금 재원 대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개요

구분	일시	외부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재정 전문가 자문회의	2022.2.15.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배관표(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염신규(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전문가별 검토 가능한 재원 확보 제안 및 논의

- (납입금의 합헌 재논의) 헌법재판소의 '03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주장할 수 없어, 법률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위헌성을 해소하여 부담금 신설이 가능하다는 전남대학교 박종미 교수의 논문을 참고하여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부가가치세 전입 방안) '17년도에 국가정책위에서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및 문예기금 전입을 검토한 적 있으며 면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19년도에 개정 검토
- (건강증진부담금 전입 방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일정 비율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입 받는 방안
 - 예술을 통한 사회 치유를 확산하겠다는 국가의 문화정책 기조에 맞춰, 정신 건강 증진·우울증 치유 등의 예술 치유 사업으로 전입 명분 확보
- (복권기금 법정 배분율 조정) 현재 공익사업으로 배분받고 있는 복권기금 수익금을 법정 배분사업으로 전환하고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 (체육기금으로 전입되는 복권기금을 문예기금 수입으로 전환) 체육기금의 여유자금이 타 기금에 비해 충분하기 때문에 체육기금 법정 배분 축소 등 복권기금 개선에 대한 국회 지적이 많음
- (문체부 소관 기금에 융합계정 설치) 문화·체육·관광이 연계된 광의의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문체부 소관 개별 기금에 융합 계정을 설치
- (저작권료 미지급금 전입) 장기적으로 지급 가능성이 낮은 재원인 저작권료 미지급금 중 시효가 종료된 재원을 문예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
- (타 기금 정률 배분) 통합문화이용권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문화예술 향유 및 예술지원시설 마련을 목적으로 복권기금 법정 대상 기금으로 편입
- (특정한 재원의 간접적 분배) 타 재원으로부터의 직접적 전입이 아니라 특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방안으로 ① 스포츠투토 실 배분액의 특정 비율, ②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 금액 특정 비율 등
- (복권기금 사용 용도 개정) 소외계층 복지지원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복권기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창작지원 사업에 투입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예술성이 낮은 미술작품 양산을 줄이고, 문예기금 출연 확대를 유도
- (일반회계 전입 확대) 일반회계 전입 확대와 문체부 예산 및 권한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예술위의 자율성도 확대 가능

■ 검토 결과

- (추진체계 마련) 재원 안정화 방안 및 효과적인 공론화를 위한 문체부와 예술위 간 문예진흥기금 재원 대책을 위한 별도 TF 구축
 - (구성) 문체부, 예술위, 외부 재정/법률/기금 전문가 등
 - (내용) 차기 정부 출범 시 정책공약 반영을 목표로 설득 논리 개발 및 사회적 활동 연계

- (사회적 공감대)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재원 확충 필요성 대국민 인식 제고 노력
 - 국회, 예술계, 일반인 대상 대규모 토론회, 간담회 개최
 - 행정, 정책 관련 유관학회 연계를 통한 정책 필요성 확산
 - 언론 홍보 및 기고를 통한 국민 지지 확보
 - 기타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노력 병행
- (입법) 21대 국회 임기 중 의원 또는 정부안 법률 개정안 발의 및 통과 목표 추진(임기: ~2024. 5.)

2) 심의제도 혁신

■ 검토 배경

- 심의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선 경과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판단 필요
- 심의 과정 및 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의 개방적 평가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
-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주로 배제나 통제가 심의 부분에서 발생한 바 심의제도의 혁신은 블랙 TF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검토 내용

- 아르고 혁신 TF 제안 심의제도 관련 내용
 -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예술인, 평론가, 전문 관객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사후 평가
 - 심의위원단의 사후 평가, PT 심의 및 지원자 참관, 개방형 심의 및 공유, 사후 심사 제도 등
 - 참여 심의위원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공정한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 풀(pool) 정비
 -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제도를 위해 개방과 공유형 심의제도 확대
 - 참관인 제도, 공유 PT제, 신진예술가 추천제도, 사후 심사제도 등
 - 심의 전담 부서 설치와 예술인 당사자의 개방직 보직
 - 선정사업 성과 공개 : 지원사업 사후 점검 결과 공유
- 심의제도 관련 정책혁신 소위원회 논의 내용 검토
 -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블랙 TF 차원에서 재검토

[표 3-8] 심의제도 관련 정책혁신 소위원회 논의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논의 내용
심의위원 풀 전문성 확보	-2015년 이후 운영된 심의제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2018년부터 심의위원 선발의 공정성 확보, 참여성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심의위원 풀(pool)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현재까지 운영 -권익위원회의 경우 예술위 심의제도에 대해 심의위원 리스트를 사무처가 직접 추출할 수 없는 부분을 높게 평가함.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심의위원 풀에 전문성만 보장된다면, 현재 구성 방식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구성 절차에서도 위원장(사무처) 중심, 위원 중심보다는 위원장과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전문성이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장르 내에서도 세부 장르 및 융합 장르가 확대되고 있으며, 예술 현장 내에서도 신진과 중견에 따라 전문가 심의 VS 대안적 심의제도 개발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할 필요
심의위원 풀 구성 및 확대	-지원심의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현재의 풀에서는 지역, 나이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긴급하게 풀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심의위원 풀의 추천 및 등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개인 등록을 안내하고 있으나, 신규 등록이 중단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모색도 필요 -지역, 장애인 등 소수자 풀에 대한 심의위원 풀 확대는 자천에 의한 것으로만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대안적 설계가 필요 -자천으로 등록하는 개방형 심의위원 풀의 경우 등록자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데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음. -개방형 심의위원 풀에 대한 자격 규정이나 거절할 근거, 심의위원 풀 선정위원회 운영의 가이드 그리고 심의위원 풀이 확대됨에 따라 심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게 되는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구분	주요 논의 내용
	필요
심의 구조 및 운영	<p>-심의위원이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닌 평가 등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십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음. 심의위원에게 권한과 의무를 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심의위원 풀을 통한 심의와 전담 심의위원 외에 실험적 심의제도를 도입한 사례 및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p> <p>-예술위의 경우 사업이 다양하기에 목적성, 장르 기반, 수월성, 다양성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심사제도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p> <p>-사업목적 및 특성에 따라 심사 지표가 다각적으로 모색될 수 있고, 트랙에 따라 전통적 전문성이 강화되는 사업은 그에 따라 책임성도 및 그에 적합한 대우도 필요함.</p>
심의 결과 수용성 확대	<p>-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현장에서는 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왜 그런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p> <p>-심의위원의 구성에 따라 심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어 심사 결과의 수용성이 낮아지거나 신뢰가 낮아짐. 때문에 심의위원이 누가 선정되든 적용할 수 있는 심사 틀 및 심의제도 운영의 전문성(사무처)이 필요</p> <p>-심의 결과의 수용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심사 기준과 심사평의 불일치에 기인함. 공모 신청서가 나갈 때 심의 기준이 함께 공지되고 예술인들은 이에 따라 제안서를 구성하는데, 심사평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의 개선 필요</p> <p>-심의 기준, 심사평, 심사 결과가 매칭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심의의 충분한 시간과 보상 등 심의 환경 개선도 필요</p>
심의제도 평가 및 피드백	<p>-예술위의 심의제도 개선(2019년) 이후, 운영 과정에서 객관적 데이터 및 예술 현장의 피드백이 필요</p> <p>-유관 기관(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위원회, 지역재단과의 워크숍 등), 행정 전문가 등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 등을 발굴하고 반영할 필요</p>

■ 검토 결과

- 심사위원 제도와 연계된 정책 및 거버넌스, 심사정책(제도)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심사제도 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예측 가능성 및 신뢰를 높이는 노력
-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심의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안) 초안 검토
 - 정책혁신 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술위 심의위원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쟁점),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안) 구성(지원총괄부)
 - 단기적으로는 2022년 공모사업의 2차 심의에서 적용 가능 사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르고 심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 현장 참여 의견 수렴 등을 통해(워크숍) 제안서를 구성, 위원회에 제안
- 블랙 TF는 심의제도 전반보다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두어, 내부에서 마련된 공정심의 규정에 대해 검토 후 의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결정

3) 예술의 가치 확산

■ 검토 배경

- 예술의 가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증한 이해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위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임. 즉 예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이해만이 블랙리스트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됨.
- ‘아르코 혁신 TF’의 보고서에서는 정책 콘퍼런스 연례화, 대국민 캠페인, ‘한국사회 예술의 가치 보고서(가칭)’ 발행, 비 정량적 지표 활용, 데이터 생산과 제공이라는 과제가 제시됨.
- 6기 위원회의 ‘예술의 가치 확산’ 소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최한 12차 회의를 통해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 논의와 콜로키엄 진행, 관련 연구보고서(『예술의 가치확산 방안 연구(2020.5)』)를 발간함.
- 당시 1, 2, 3단계로 나누어 1단계인 2019년은 가치 인식 공유, 2단계 2020년은 캠페인 실행, 3단계(2020년~2025년)는 장기적으로 예술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시스템 구축과 피드백을 목표화

■ 검토 내용

- 공론화 및 운동형 사업 사례
 - 아트 인 사이트 등 예술의 가치 홍보형 동영상 제작: 9편 외
 - 예술 가치 확산 주간 (Korea Arts Advocacy Days): 예술나무 캠페인 연계 10월
 - 예술 가치 옹호 그룹과 유사한 활동: 예술나무 포럼(김희근 회장), 홍보대사
 - 예술 후원 관련 시상식: 현재 기업 중심 후원자 시상
- 대국민 예술의 가치 확산 사업 제안 내용 검토
 - 예술 큐레이팅(시민 등) 콘텐츠 제작: 예술작품 관련 동영상 등
 - 예술 동행상
 -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공간: 찾아가는 공유 공간(판교, 을지로, 여의도 등)
- 문화예술계 외 행정, 입법 영역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사업 검토
 -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입법, 행정부 참여하는 정례 포럼
 - 예술현장 혹은 예술 관련 카드뉴스 발송 등
 - 국회의정연수원: 의정아카데미(문화예술과정-전통), 국회최고위과정(인문학)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 연구형 사업 검토
 - 한국사회 예술의 가치 보고서: 비정량적 지표를 포함한 데이터 생산과 제공을 통한 예술 가치 확산
 - 2022-2026년 예술 가치 인식 조사
 - 일반 국민 혹은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예술의 근원·사회·경제적 가치 인식을 조사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의 가치와 공공성 확산 혹은 정부 예술지원의 당위성과 근거자료로 활용
 - 예술 가치 인식의 편차를 계량화하여,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

■ 검토 결과

○ 2022년부터 지속적, 정례적으로 「예술의 가치 인식 조사」 실시

- 조사 목적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 인식을 조사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예술 지원 당위성과 근거자료로 활용
- 예술 가치 인식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편차를 계량화하여,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정책 자료로 활용
- 행정부(기재부 등), 입법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술의 근원·사회·경제적 가치 인식 조사도 독립 혹은 병행하여 수행

- 조사 방식

- 조사 결과의 일반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국 단위(국민)의 표본조사 추진
- 층화표본추출 방식으로 표본의 지역별(17개 시·도), 성별(남·여), 연령별(10대~60대) 대표성 확보 필요
- 표본집단별 최소 50명 내외, 국민 약 10,200명 내외의 조사 대상 예상
- 정부와 입법부의 경우, 정부 부처와 국회 종사자 중 부처별 임직원과 국회의원 및 입법조사관,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적정표본 추출하여 인식 조사 및 분석 실시

- 기대 효과

- 예술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행정부와 입법부 종사자 별도 그룹화)을 계량화하고, 다년간의 시계열 자료로 관리함으로써, 예술의 지평 확대와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 2022년부터 지속적, 정례적으로 「한국사회 예술의 가치」 보고서 발간

- 조사 목적

- 기존의 실태조사나 백서를 종합하거나 기존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한국사회 예술의 가치 보고서>(가칭)를 발행
- 예술 행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여기서 파생되는 국민의 문화적 삶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적극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옹호하는 사업을 제안
- 정량적 가치 외에 자존감과 행복 등 비정량적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전환에 있어서 예술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보유 데이터를 가공하고 생산하여, 외부에 제공하면 예술 관련 연구 확산 계기 마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보관된 누적 데이터, 문예연감 발간 시 조사된 데이터 등을 참고로 한 분석 및 연구도 포함

- 조사 방식

- 비정량적 지표 포함(자존감, 행복 등)
- 데이터 생산(백서 등의 자료)과 활용을 통한 예술 가치 파악과 분석

- 기대 효과

- 예술 가치에 대한 비정량적 지표와 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매년 발간된다면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대응 시 활용 가능

4)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 검토 배경

- 7기 위원회가 시작된 이후 문예기금의 전시 및 공연 관람료 지원사업 추진, 추경 공공미술 프로젝트 협조 과정,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탈락 단체 지원 요구, 예술로 기록 사업의 지연 등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반성과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문 채택이 이어져 왔음에도 여전히 예술위와 문체부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위와 문체부 간 수평적 관계 구축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검토 내용

- 2021년 초에 발표된 ‘문체부 산하기관 갑질 관련 설문조사’ 결과 검토
 -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의 갑질 경험 여부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예술위와 문체부 간의 수직적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음.

[표 3-9] 문체부 산하기관 갑질 관련 설문조사 결과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의 갑질 경험 여부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3,788)	28.0	72.0
구분	문체부 본부	(185)	33.5	66.5
	문체부 소속기관	(831)	21.2	78.8
	문체부 공공기관	(2,435)	30.4	69.6
	문체부 유관기관	(337)	24.6	75.4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경험한 갑질											
		사례 수	불필요한 업무 지시	책임 비용 전가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비정규 직 차별	인사 적체 해소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 요구	금품 향응 요구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전체		(1,061)	57.4	10.7	10.1	4.4	3.2	2.3	0.4	0.3	11.2
구분	문체부 본부	(62)	62.9	8.1	4.8	8.1	3.2	3.2	0.0	0.0	9.7
	문체부 소속기관	(176)	46.0	7.4	14.2	12.5	5.7	2.3	0.0	1.1	10.8
	문체부 공공기관	(740)	61.5	11.6	9.5	1.8	2.2	2.2	0.4	0.1	10.8
	문체부 유관기관	(83)	41.0	12.0	10.8	8.4	7.2	2.4	1.2	0.0	16.9

출처 : 문체부(2021) 내부자료 참조

- 블랙 TF 점검 내용과 같이 양 기관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구조적 개선을 이뤄나가야 하지만 이 개선이 인식적 개선과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구조적 개선을 양 기관의 구성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양 기관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은 구조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 차원의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TF 차원에서 언급된 개선 방안과 기존 연구물을 통해 언급된 개선 방안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구조적 개선 방안 검토

개선안	검토 결과																						
<p>① 양 기관이 수평적 업무협의를 위한 소통창구 일원화</p>	<p>-근래에 문체부 예술정책과와 예술위 기초부를 통한 업무 소통 창구 일원화를 1년 정도 시도한 바 있으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철회된 상태임. -따라서 양 기관의 업무 소통 창구 일원화를 통한 이점은 유지하면서 단점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p>																						
<p>② 양 기관이 불법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독립된 부서를 설치 혹은 지정하고 외부의 기관과 연계하여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이와 관련된 규정 신설</p>	<p>『블랙리스트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종보고서』상의 제안으로 기존의 예술위 신고 창구(참고 1)는 문체부 갑질과 관련된 곳들은 아님.</p> <table border="1" data-bbox="544 555 1374 925"> <caption>(참고 1) 아르코 신고제도 종합 안내소</caption> <thead> <tr> <th>분류</th> <th>신고제도</th> <th>운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소통 제안</td> <td>도란도란테이블</td> <td>윤리경영 소통창구</td> </tr> <tr> <td>시원시원핫라인</td> <td>위원장 직속보고 채널</td> </tr> <tr> <td rowspan="2">고충 상담</td> <td>인사고충상담창구</td> <td>근로/인사 등 직무상담</td> </tr> <tr> <td>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td> <td>성비위사건 상담 및 처리</td> </tr> <tr> <td rowspan="4">부패 신고</td> <td>청렴포털</td> <td>국민권익위 신고채널</td> </tr> <tr> <td>부정청탁갑질신고</td> <td>청탁금지법 위반 신고</td> </tr> <tr> <td>레드휠슬헬프라인</td> <td>익명부패신고센터</td> </tr> <tr> <td>클린신고센터</td> <td>금품수수 자체 반환</td> </tr> </tbody> </table> <p>-문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갑질 피해 신고는 문체부 갑질피해 신고채널(실명, 익명 가능)을 통해서 가능한 상황이며 이러한 기존 채널을 통하여 공익제보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함.</p>	분류	신고제도	운영 내용	소통 제안	도란도란테이블	윤리경영 소통창구	시원시원핫라인	위원장 직속보고 채널	고충 상담	인사고충상담창구	근로/인사 등 직무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성비위사건 상담 및 처리	부패 신고	청렴포털	국민권익위 신고채널	부정청탁갑질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레드휠슬헬프라인	익명부패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금품수수 자체 반환
분류	신고제도	운영 내용																					
소통 제안	도란도란테이블	윤리경영 소통창구																					
	시원시원핫라인	위원장 직속보고 채널																					
고충 상담	인사고충상담창구	근로/인사 등 직무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성비위사건 상담 및 처리																					
부패 신고	청렴포털	국민권익위 신고채널																					
	부정청탁갑질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레드휠슬헬프라인	익명부패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금품수수 자체 반환																					
<p>③ 내부제보자 보호 법제로서 현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내부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 추가</p>	<p>『블랙리스트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종보고서』 상의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제보자의 정의 및 예술인보호관 업무에 내부제보자 관련 사항 추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신고가 가능한 자(곳)를 추가 : 국회의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p>④ 예술위 차원에서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 제정 필요</p>	<p>『블랙리스트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종보고서』 상의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이나 조직 내부에 불법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독립된 부서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관과 연계하여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조직의 장 또는 고위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제보자 보호를 수행할 방안을 마련 -내부제보 이후 제보에 대한 처리 절차에서 제보자의 비밀 유지와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하며 전 절차에 걸쳐 제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 -제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내부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 -내부제보자가 제보 이후 겪게 될 정신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내부제보자가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제보에 따른 공로를 인정하여 적절한 보상 수여 -누구든지 익명으로 일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청구하고,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전 직원 인권교육 등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조직 내 평직원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평의회 제도 마련 -조직 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요청을 수렴하는 제도 마련 																						

○ 인식적 개선 방안 검토

개선안	검토 결과
<p>양 기관의 수평적 관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인식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며, 장관과 위원회가 점검 내용과 향후 과제를 매년 일정한 시기에 공표</p>	<p>-양 기관의 수평적 관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인식조사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 정부의 다른 정책과 중복되는 측면이 없는지 검토를 진행한 후 로드맵 수립 필요</p> <p>-예술위와 문체부 간의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이 일종의 양 기관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문체부 유관기관들은 이런 공동선언조차 없는 상황이므로 문체부와 문체부 유관기관들 간의 통합적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이나 수평적 관계를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예술위가 다른 기관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블랙 TF 차원의 논의 필요</p>

■ 검토 결과

- 앞서 제시된 예술위와 문체부 간 수평적 관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들은 TF에서 간단히 공유된 바 있으나 각 개선 방안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면밀히 논의하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새로 출범할 8기 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에 제시된 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현안 대응 활동

1) 블랙리스트 관련 내부 감사보고서 점검

■ 점검 배경

-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원심의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자체 감사의 내용이 축소 및 은폐와 함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2015년도 감사결과보고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행협치추진단의 자문에 따라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함.

■ 점검 내용

-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원심의 개입 의혹 관련 2015년도 자체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검토
- 이행협치추진단 권고에 따른 2018년도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표 3-10] 블랙리스트 관련 자체 감사 진행 경과

〈블랙리스트 관련 자체 감사 진행 경과〉

-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원심의 개입 의혹 관련 자체 감사
 - 감사 기간: 2015.9.23.~10.29.
 - 감사 결과 확정: 2015.11.11.
 - 감사 결과 처분 요구 통보: 2015.11.(감사부 → 인사부서)
 - 홈페이지 처분요구서 공시: 2015.11.16.
 - 징계 처분: 2명, 2015.11.30.(견책, 엄중 경고)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 권고안'
 - 예술위 통보: 2018.7.3.(비상임 위원 2명, 직원 21명 총 23명)
 - 감사실 1차 검토: 2018.8.16.~2018.8.31.
 - * 책임규명 권고안에 적시된 징계 권고 대상자의 위반행위 내용이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와 증거서류로 확인되는지 검토
 - 감사실 2차 검토: 2018.9.1.~
 - * 징계 권고 대상자의 위반행위가 명확치 않으면 증거자료, 문답서 등 관련 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 특정 및 징계 권고 대상자별 징계 시효 검토
 - 감사 결과 확정: 2018.10.11.
 - 감사 결과 처분 요구 통보: 2018.10.(감사부 → 인사부서)
 - 징계 처분: 2018.10.19.(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 주의 2명)
 - * 처분 제외: 10명(퇴직 6명, 선행처분 1명, 시효종료 3명)

■ 점검 결과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 권고안(2018.7.)'에 따라 적시된 징계 권고 대상자의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 후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였고, 이 처분요구서에 의거, 인사 부서에서 징계함.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제기한 기존의 자체 감사결과보고서(2015.11.)의 오류들이 2018년도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정되어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다만, 2018년도 감사결과보고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어야 하나, 점검 결과 홈페이지 공지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감사부서에 공지를 요청하여 공지 조치
- 또한 2015년도와 2018년도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연계해서 볼 수 있어야 2015년도 감사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나 별건으로 각각 공지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 내용의 공식적인 공지와 링크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됨.
- 수정 공지문은 블랙 TF에서 작성하고, 이 내용을 당시 관련 당사자와 감사실의 합의를 거쳐 공지 예정

2)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관련 성명서 발표

■ 발표 배경

-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건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안호상 사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그 발표사항이 예술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예술위 차원의 의견을 발표할 필요에 대해 블랙 TF 및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 발표문 준비 과정

-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위가 성명서 등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자체 인선에 대한 개입이라는 의견 등 이견이 도출
- 위원회 명의 방식, 위원들의 연서 방식, 서울시 공문 발송 등 성명서의 발표 주체·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수렴됨. 예술위원회와 서울시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블랙 TF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 즉 본문의 내용은 위원회를 주체로 하되, 전국적인 차원의 위원회 위상과 상황을 고려해서 성명서를 블랙 TF 명의로 발표하는 것으로 합의

■ 발표 완료

- 블랙 TF에서 작성된 성명서 초안을 근거로 기관 누리집에 성명서를 게시하여 대외적으로 발표 및 전달

[표 3-11] 성명서 전문

지난 11월 1일 서울특별시가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을 세종문화회관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피해자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으로서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우리 사회와 문화예술계에 끼친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다수의 블랙리스트 사건들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심의 사건>, <항연 제작비 관련 국립극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당 전용 사건>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법원, 감사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검증된 사실들이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에게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의 진실 공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안호상 사장 스스로 다수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점, 당시 국립중앙극장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2. 최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자신의 블랙리스트 사태 연루 문제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개인들의 실명 공개, 사실관계에 대한 자의적 해석 등을 일방적으로 공문화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권고한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접근 방식과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는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의혹들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당사자 소명만을 확인했을 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이행협치단, 당사자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어떠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피해자들에 대한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2021년 11월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3)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 협력

■ 추진 배경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단체는 332개, 피해자는 8,931명, 피해 사례 9,273건에 달하지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다룬 사건은 145건(신청 112건, 직권 33건)에 불과함.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2권)」, p. 329
-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의 목소리는 계속 드러났지만, 정작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음.
- 예술위의 경우 포괄적 차원에서 예술 현장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해 사과했으나 팝업씨어터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 블랙리스트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사과를 진행하지 못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작동시킨,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고발하거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은 77건임.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혁신 TF’(2018.6.), <아르코 혁신 TF 보고서>, p. 13~19
- 대다수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목소리가 계속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사회적 기록이 절실함.
- 차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 예산이 누락된 상황이므로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기관들은 각각 예비적 성격의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추진을 위한 검토 사항

- 예술위의 별도 예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 검토
 - 2022년 1/4분기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을 통하여 예술위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예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 제안
 - 예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은 예술위 관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목록화 및 피해 사실 유형화, 유형별 피해자에 맞는 긴밀한 소통과 사과 방안 도출,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사업을 위한 연구 및 토론회 진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간담회의 소통과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소통체계 기획
 - 백서 내용을 기반으로 제시된 주요 사건 피해자 대상 우선 추진
(진행 과정에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간담회 대상 확대 가능)
 - 추후 예술위의 2022년 예비적 성격의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에 환류하여 문체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을 지속 진행하도록 촉진

■ 추진 예정

- 2022년 12월 30일 예정된 예술위-문체부 장관 간담회 때 동 내용을 전달·공유
- 신규사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미나·토론회 등 현장 공론화, 문화예술행사 사업 등 기존 예술위 사업에 사회적 기억사업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는 노력 필요

4)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제안

■ 제안 배경

- 예술위의 조직과 사업의 자율성, 독립성,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할 구조적인 전환 전략에 근거해 예술인과 예술 행정인 간 신뢰 회복과 예술생태계의 민주적 복원을 목표로 실질적 차원의 활동과 장기적인 소통을 위한 준비 추진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소통체계 구축과 수시로 제기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위원들의 개인적인 선택사항 혹은 거리를 두어도 좋을 사항이 아닌 예술위가 예술계와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진정한 소통 추진 필요
- 블랙리스트 사태로 야기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침해는 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생태계의 활력 증진이 제일의 사명이며 최우선 과제인 예술위의 존재의의를 훼손하고 상실시키는 결과가 됨.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밀한 통찰 및 소통을 통해 예술계 현장이 예술위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공공기관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장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움직임의 첫걸음

■ 제안 내용

- 상설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TF 조직 한계점 해소
 - TF 조직의 임시성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의구심과 불신 해소
 - 그간 블랙 TF가 피해자 소통을 위한 1~3차 사전 준비회의에서 경청하고 수렴한 의견들을 기초로 일관성 있는 대내외 소통을 통한 실질적 회복 구현
 - 문체부의 표현의 자유 주간 및 사회적 기억사업 수행 시 예술위의 책임 주체 사전 확보와 준비체계 구축
 - 상설 소위원회의 인력(전담 혹은 겸직) 배정으로 예술계 현장과의 신뢰성 강화
 - 예술 현장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자들의 상시 접근 창구 마련
- 상설 소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내용 검토
 - 아르고 혁신의제 추진 상황 지속 점검
 -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과의 연계
 - 예술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해자들과 장기적 관점의 소통체계 구축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예술 현장으로부터의 신뢰 회복, 블랙리스트 관련 직원들의 회복을 위한 내부 소통 추진. 단, 내부 소통은 사무처와 노동조합 등 자율적인 일괄 추진 지원과 공유
 - 「블랙리스트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의 공유, 검토 및 제도화 추진
 - 소위원회 활동의 대외 공유(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아르고 대토론회 등)

■ 제안 결과

-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이 위원회의 서면 의결(2022.5.23.)로 통과
- 7기 위원회 임기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외부 위원 참여는 8기 위원회 구성 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
- 소위원회 참여 8기 위원으로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참여

IV. 성과 및 한계

1. 활동 성과

■ 블랙리스트 관련 예술위 소통 창구 역할

- 7기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성찰과 대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블랙 TF의 첫 행보로 세종문화회관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전 국립중앙극장장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블랙리스트 사태와 피해자들에 대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
- 블랙 TF가 전담하기로 한 아르고 혁신과제 4개에 대한 추진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블랙 TF의 활동 방향성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구체화함.
- 블랙 TF는 이행협치추진단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2년째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표류 중인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에 공감함. 따라서 블랙 TF는 7기 위원회와 문체부 장관의 정기 정책 간담회에서 이 사안을 중요 의제로 제안하여 문체부와 관련 기관들이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 TF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견인함.
- 예술위 내부 소통과 예술위 관련 피해자와의 소통 과제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
- 블랙 TF는 우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백서에 제시된 예술위 관련 주요 블랙리스트 피해자 단체들과의 몇 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했으며, 공연예술창작산실 블랙리스트 주요 피해자와 예술위 관계자 간의 소통과 화해의 장을 매개하기도 함. 또한 예술위 사무처를 이끄는 본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기관 내부 소통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함.

■ 블랙리스트 관련 내부 감사보고서 점검 성과

-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한 최초의 자체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축소 및 은폐된 부분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조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는 데 일조함.
- 블랙 TF의 감사결과보고서 점검을 통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함.

■ 대내 소통 방안 검토 성과

- 대내 소통 방안을 추진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 발생 당시 직원들의 처한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양함과 그에 따른 상처도 다양하다는 것을 공유함. 따라서 추후 대내 소통은 TF나 소위원회가 모색하기보다 예술위 사무처와 노동조합 내부의 동력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함. 다만, 예술위 구성원들의 회복을 위한 내부적 제도 개선 과제 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색 가능

2. 한계

■ 블랙 TF의 구조적 한계

- TF라는 조직의 임시성으로 인한 진정성 미흡에 대한 예술계의 지적
 - 기능적인 시한부 조직이므로 지속적 활동에 대한 예술계 의구심 존재
- 블랙 TF 활동에 대한 예술계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과 내부 동력 불일치
 - 예술계는 실질적 사과와 소통 요구, 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에 있어 부담과 어려움 존재
- 초법적 국가범죄인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와의 소통을 위한 경험 부재
 - 피해자 소통을 위한 경험 부재로 당위적 소통론 대비 소통 전략 미흡

■ 블랙 TF 구성원의 한계

- 블랙 TF 구성원으로 예술계 피해 당사자들의 참여 유보
 - 피해자 소통 관련, 의사 반영 전담 통로 부재로 인해 소통 방식을 간담회로 대체하며 비효율 초래
- 예술위 사무처의 간부급과 일반직원들의 균형 있는 참여 부재
 - 예술계 현장과 직접 대면하는 일반직원의 블랙리스트 사건 체감도와 의견에 대한 사무처의 수용이 어려움.
- 피해자 소통을 위한 전문적인 전담 인력 부재로 소통의 과정과 내용이 휘발될 가능성
 - 예술위의 블랙 관련 대응 및 조치사항들에 대한 아카이빙 불비

■ 블랙 TF 활동 내용의 한계

-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혁신과제 수행에 대한 검토가 TF 운영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문제
 - 23개 과제 중 현재 진행 중인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TF 활동 종료 후에는 어려움.
- 피해자 소통을 통한 예술위 내외 신뢰 회복 의식과 의지, 전략 불명확
 - 피해자 소통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인식, 소통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소극적 인식이 지배적임. 공격과 회피 혹은 방어적 문화의 일상화를 타파할 소통전략이 미흡하며, 소통전략을 수립할 전문가 총원 계획도 부재
- 피해자 소통을 위한 사전 준비 간담회 중심 활동
 - 실질적 소통을 통한 사과와 화해, 신뢰 회복의 계기는 계속 유보

■ 블랙리스트 관련 내부 감사보고서 점검과 수정의 한계

- 이미 문서화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록물인 문서 자체의 수정이 불가능한 점이 한계로 대두
 - 따라서 수정 공지안을 별도로 게시하고, 이와 연동하여 과거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같은 공지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조치함. 또한 이러한 조치 경과 중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였으나, 공식 문안이 지니는 무게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정 공지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

■ 대내 소통 방안 검토 한계

- 내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상호이해 없이 외부자 시각에서 선불리 개입할 경우, 사무처 직원들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처만 건드리며, 제2의 상처까지도 발생할 위험성 상존
 -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하였던 해당 시기에 예술위에서 예술 행정을 담당하지 않았던 비당사자들이 예술 위 내부의 회복을 주도적으로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공감대 형성보다는 오해와 반감을 일으킬 여지가 많음